

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12. 2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12월 22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 의결안건 제411호~제462호, 보고안건 제42호~제50호 참여

이 승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 의결안건 제410호, 제412호~제462호, 보고안건 제42호~제50호 참여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0년도 제18차부터 제21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9차부터 제22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0년도 제18차부터 제21차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9차부터 제22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410호 『금융감독원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주관위원이 내용을 설명함

※ 2021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은 분담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금감원 예산지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심의한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편성함. 그간 감사원 및 공운위 등에서 지적한 금감원의 방만 경영개선과 금감원

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년도 지출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되, 금감원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및 금융교육 등 필요한 사업예산은 적극 지원함. 다만, 전산개발의 경우 시급히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편성하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중·장기 정보화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정보화전략 컨설팅예산을 반영함. 아울러 그동안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대의견의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심사함. 그 결과 2021년 금감원 예산은 전년보다 약 0.8% 증액한 3,660억 원 수준으로 편성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11호 『예금보험공사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 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예산이 계산상으로는 20%가 증가했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 (보고자) 첫 번째로 예금보험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차세대정보화 사업이 많이 늦어짐.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제일 늦게 시작하여 증가율이 대폭 큰 것임. 두 번째로 정

부지침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적립이 있었음.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벌 교육센터 숙소 증설이 있음. 이 경우는 24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을 신청하였지만 내년도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 때 재검토하여 하반기 때 증축할 수 있도록 60%만 반영함. 이에 따라 주로 차세대 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2호 『서민금융진흥원 2021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413호 『서민금융진흥원 2021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2021년도 업무계획안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예산안 20% 범위 이내라는 조항이 왜 갑자기 추가된 것인지? 내년 목표를 위해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추가한 것인지?

○ (보고자) 다른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에 그런 것이 없어 추가함.

○ (위원) 내년에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음. 법정최고금리 인하하면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금 생각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 탄력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4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4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년 주택금융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다른 기관은 예산이 증가한 데 비해 주택금융공사는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닌지?

○ (보고자) 자본예산이 2020년에 667억 원인데 요청액 자체가 약 80억 원 정도 감소하였음. 올해까지 차세대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입에 필요한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고 내년에는 더 이상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본예산이 많이 감소한 것임. 그러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것들은 삭감을 최소화하고 일부 수요가 인정된 것은 증액하여 반영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6호 『한국산업은행 2021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417호 『한국산업은행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안』, 제418호 『중소기업은행 2021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 제419호 『중소기업은행 2021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 승인안』, 제420호 『신용보증기금 2021년도 업무계획(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2021년도 업무계획안 및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위원) 다른 곳은 전부 업무계획(안)과 예산(안)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업무계획(안)만 있는 이유는 예산(안)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한국산업은행은 공급을 68조 원으로, 중소기업은행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한 범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면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런 틀(frame)이 없는 것인지? 이 공급규모가 어떤 산업의 업종에 대한 것인지도 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안전에는 제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구체화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왜 자본예산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 (보고자)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둘 다 총공급계획에 대비해서 20%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승인 없이 변경이 가

능하고,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승인 이후 변경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정부예산의 투입이나 정책적 변경의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따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음. 두 번째 말씀하신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얼마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1년을 지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 주요 주력산업이라든가, 소재·부품·장비, 올해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특별히 자금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자본예산 부분이 나와있지 않은 이유는 중소기업은행이 통상의 시중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기은법에서 금융위가 인건비 예산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위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는 어떠한지?
- (보고자) 한국산업은행은 차세대 디지털 예산이 올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자본예산이 18%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위원) 차세대 예산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자본예산으로 1,170억 원이 들어간 것인지?
- (보고자) 전산예산임. 차세대 디지털 예산부분이 끝난 것이고 디지털전환에서 IT투자가 2020년에는 400억 원이 들어가다가 2021년에는 293억 원으로 좀 줄어 들고 디지털 관련 설비예산이 2020년에는 592억 원이 들어가다가 2021년에는

580억 원으로 조금 축소되어 IT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임.

- (위원) 차세대처럼 규모가 큰 것이 없는데 전산 예산이 1,170억 원이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 (보고자) 전년 대비 증가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임. 올해는 특히 IT예산에 대해서는 경영예산심의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산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행부터 수은이라든가, 캠코, 예보의 모든 차세대 디지털예산을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전년에 대비하여 훨씬 더 자세히 검토함.
- (위원) 산업은행은 1,170억 원인데 중소기업은행은 없으니까 두 기관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봤던 것인데 중소기업은행도 자본예산이 있으나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아무래도 한국산업은행이 중요하니까 대기업으로 가는 자금과 중소, 중견, 혁신성장 이런 쪽으로 가는 자금의 흐름에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 중소·중견, 혁신 이쪽을 보면 66조 원으로 되어 있음. 그러면 당연히 한국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쪽으로도 자금지원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뜻인지?
- (보고자) 통상 자금계획을 세울 때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

에 대해서는 얼마를 공급하겠다고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혁신성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경제정책방향들을 발표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음.

- (위원) 예산안에는 큰 덩어리로 ‘혁신성장’, ‘중소기업’ 이렇게 적혀있지만 결국 KPI를 하려면 그것이 A부서에서 1조 원, B부서에서 1조 원 이것을 다 모아서 결국 68조 원이 나온 것임. 1년이 지난 뒤에 KPI를 위해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지점 별로 다 잘라서 나갈 것임. 그러니까 합해서(add up) 했든 아니든 그것을 나누어주든 간에, 결국 그것이 예를 들어 유통업의 얼마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나올 것임. 그러니까 기업부 1부는 얼마, 기업부 2부는 얼마, 기업부 3부는 얼마, 서비스는 얼마 그렇게 나올 것임.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Lump sum) 80조 원 한다고 하면 1년 뒤에 평가를 못할 것이기 때문임.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적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보고자) 제출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21호 『신용보증기금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 운영위원회의 회의방식 개선, 자회사 설립 근

거 마련, 용어 정비 등을 이유로 신용보증기금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22호 『(주)하나은행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 제423호 『(주)우리은행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19년 중 금융사고로 인해 실시한 검사로 금감원 검사인력이 과도하게 투입된 (주)하나은행과 (주)우리은행에 감독분담금을 추가부과하는 내용

○ (위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사인력 투입을 초래했다면 원인제공자한테 분담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음. 그런데 부과기준서를 보니 상위 0.1%에 들어가면 30%를 추가하고, 상위 0.11%라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입인력이 340명이었다면 추가분담금이 하나도 없음. 그런데 341명이 되면 30%를 추가로 내게 되어 46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니까 형평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음. 그래서 단계를 세분화하여 차등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 (보고자) 동 제도는 2014년 12월31일에 도입되면서 2015년에

해당하는 감독분담금에 대하여 2016년부터 추가부과 되도록 운영을 해 오고 있어서 실제 추가부과제가 운영된 시일이 길지 않음. 그래서 운영해 나가면서 이 제도를 더 정교화해 가고 관련 부분에 대해 개선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다만, 추가분담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이 기준 자체를 상위 1%로 할 것이냐, 0.1%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상위 1%로 하게 되면 추가분담금을 받게 되는 금융회사가 너무 많아져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 때문에 0.1%로 완화된 부분이 있음.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제도 자체를 처음에 설계하면서부터 추가적인 감독수요를 일으킨 것에 대해 금융회사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금융회사 부담도 감안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실무진과 논의하도록 하겠음.

- (위원) 분담금이라는 것이 감독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수수료로 받는 개념인데 여기에 감독수요를 유발하지 말라는 계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됨. 이것이 감독수요를 줄인다는 측면도 있고 금융회사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으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형식은 재량적으로 되어 있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부과를 거의 의무화하는 개념인데다가 근소한 차이(marginal)로 감독수요를 유발한 것을 어떻게 범위(scale)화해서 그것을 분담금에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음. 더구나 지금 ‘금융사고’라

고 얘기되는데 동양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건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하나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분담금을 부과함. 이번 사례(case)의 경우에는 부문검사 나간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금융사고로 정의하고 부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징금적인 제재가 아니냐고 하는데 제재라고 하면 분명한 산출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량으로 놓고 산출근거 없이 30%라는 일괄금액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시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음. 그래서 차등화를 해서, 30%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비례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는 방안들도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규정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0%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0%에 대한 재량이 없었음. 그래서 추후에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그 기준을 조금 더 세밀화해서 정교한 제도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위원) 계도적 성격이냐, 징벌적 성격이냐 하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부과하는 근거를 규정으로 해도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상위 법령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지? 실무적인 생각은 어떠한지?
- (보고자) 이것이 과징금의 성격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어서

모범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지금 감독규정은 시행령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음. 금감원과 추가적으로 실무작업을 해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겠음.

-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현재로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상위로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것과 이것을 딱 0.1%로 묶었는데 이것을 축소(scaledown)해서 30%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5%, 30%, 45%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한 (안)을 만들어서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상위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위 0.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0.1%로 되었음. 이 얘기는 단순히 생각하면 1,000번에 1번 정도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위 1%는 100번에 1번 정도 일어나는 것임. 지금 이 제도 자체의 부과대상이 아주 예외적으로 검사수요를 많이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 부과되는 것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정교화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나, 지금 선을 하한선으로 두고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금액을 무조건 더 적게 하는 방향보다는 지금 선을 평균선으로 두어서, 사실 이것보다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1명만 적으면 하나도 안 내고 1명만 넣으면 4억 원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컨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1%를 투입한 사람이나 0.1%를 투입하는 사람을 똑같이 한다면 1%를 더 많이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범위(scale)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고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시고 여기에서 논의해서 합리적 의결을 하면 좋겠음. 부과하는 금융위원회도 필요하지만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회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인 부과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 차제에 검토하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24호 『티오비자산관리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25호 『(주)더하이원클라우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26호 『(주)투피엠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27호 『(주)폴라리스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4개 대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

- (위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좋은데 취소대상 업자들과 거래하는 고객은 없는지?

- (보고자) 해당업체들은 등록 이후에 단기간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이용자나 이용금액에 대한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황임.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된 법인은 기존 채권에 대해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 있을 때는 대부이용자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위원)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지만 “이 4개 업체는 등록취소 되었지만 불법채권추심 등이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
- (보고자)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취소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취소 사실을 공개하게 됨. 대부이용자들이 대부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 불법금융단에 민원을 내면 기본적으로 보호는 다 받게 됨. 그 부분은 공시할 때 추가적으로 문구를 넣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음.
- (보고자) 소비자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하면 이 4개 업체 중에서 티오비자산관리대부(주)는 매입채권 추심업자임. 직접 대여를 하는 업체가 아니고 남한테 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업체이고 관련해서 활동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나머지 3개 업체는 P2P업체임. P2P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P2P플랫폼을 개설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추심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민원발생으로 인해 금감원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 팝펀딩은 P2P업체이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P2P업체가 현재까지는 대부업법의 관리감독 대상임.
- (위원)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에서 P2P업체 대부업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28호 『(주)신한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29호 『(주)그레이드헬스체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0호 『삼성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1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2호 『카카오뱅크(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3호 『토스증권(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4호 『토스혁신준비법인(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5호 『(주)코인플러그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6호 『DB손해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7호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8호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39호 『(주)쿠팡파이낸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40호 『하나생명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41호 『삼성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42호 『(주)우리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43호 『현대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44호 『신한카드(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445호 『(주)한국NFC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심사안』, 제446호 『(주)아이콘루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음

- (위원)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음. 첫 번째 (주)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진출 관련, 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진출 필요성, 은행이 중소 실물업체들 시장을 지배(dominate)하는 효과,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제시한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하는 것, 이것도 조금 나쁘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카드시장에 끌어들이겠다는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사업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득이 없는 미성

년자들에게까지 이런 것을 해서, 물론 부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 스스로 소득이 있어 본인 카드를 사용하고 재무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듭.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빚이 범람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제도를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주)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관련, 현재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은 중소 핀테크업체가 아닌 소수 대형 핀테크업체들이 1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은행은 매출데이터 확보를 통해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낮음. 따라서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 고객들은 더 편리하게 은행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받는 등 다른 혜택을 볼 수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함으로써 그 매출데이터를 통해 소위 말하는 신파일러(Thin Filer)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출을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지급결제 대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데 최소한 4~8일 정도가 소요됨. 만약 은행에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은행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함. 부수업

무로 플랫폼 업무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부동산시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미 부수업무로 허용된바 있음

- (위원) 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판매된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은행이 음식주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함. 다만, 기업금융과 같은 부분이 약화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봄.
- (위원) 이 혁신금융서비스는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고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와 음식배달업자 또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 금융업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 플랫폼 사업 자체가 아니고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어 보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이 실무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측면보다는 은행이 배달업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것 같음. 빅테크(big tech)들이 최근에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고객을 흡수해 가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에 대한 반대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보

다는 이것이 현실이니까 이 부분을 은행산업들이 어떻게 적응시키고 현실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함.

- (위원) 한 사례로 요즘 은행앱을 들어가 퀴즈 풀면 10포인트, 케이크선물도 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신한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을 통과시키면 여러 은행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음. 현재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까지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범위를 이 정도까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까지는 통과시켜 주고 다른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확대하는 것은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 이번 건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이 샌드에서 놀라고 만들었으므로 놀게 해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고, 2년간의 기한을 주기로 한 것이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지금 논의된 우려 사항 등을 감안해서 2년 동안 실제 운영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음. 은행 앱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음식 주문하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은행들이 고객 신용정보도 얻고 필요한 결제도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신용카드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삼성카드(주)와 신한카드(주)에서 신청한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문제는 사실 그동안 있었던 가족카드의 새로운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음. 가족카드라는 것은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야 되는데 지급방식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고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학원비라든지, 학용품을 구매한다는 등의 용도로써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 한도도 월 10만 원, 건당 5만 원으로 제한했음. 다만, 학원비 지출처럼 고액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해서 한도를 확대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금 현재 여전법상으로도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가 아예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님.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후불교통기능을 탑재해서 이미 신용기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그런 지급수단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신청한 것임.
- (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때 똑같은 문제제기를 했음. 아

무리 혁신도 좋지만 신용카드라는 기본 컨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신용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이 있는 사람이 신용을 쌓아서 주는 것이 신용카드인데 12세 미성년자의 편의성 때문에 부모카드를 쓰는 것보다 본인카드가 좋다고 해서 주는 것이 혁신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했던 것인데 그날 회의 때 ‘혁신’이라는 것이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지만 자신은 없다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 ‘가족카드’의 변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음. 어차피 본인 명의의, 예를 들어 부모가 발급받은 카드를 월간 이용한도 내에서 제한조건으로 명의만 자녀의 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임. 요즘 ‘엄카’ 같은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으며 아이들한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카드를 빌려줘서 아이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그런 문제에 대한 지급수단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개념이라면, 가족카드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신용 없는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신용카드라는 것이 신용 있는 사람에게 발급해 주는 것인데 편리성 때문에 12세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금융의 논리에 맞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임.
- (위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아내가

저희 아이에게 카드를 빌려주기도 하고 사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음. 그리고 또 교통카드를 발급하기도 하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12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이용부분만 제고한다는 측면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는 굳이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함.
- (위원) 일단 ‘가족카드’라는 것은, 본인의 신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신용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신용카드의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음.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해함.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신용카드 회원인 카드소지자들이 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호해 주려면 자녀들의 명의로 제한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그러한 분실·도난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또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열거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남용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함.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임.

- (위원) 앞의 의견에 동의함. 혁신 신청 들어온 것들이 사실 우려가 없는 것들이 없음. 그런 것 중에서 이것은 우려가 적은 내용인 것 같음. 우선,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의 문제도 없어 보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이 신용카드에 대해 알게 됨으로 인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입장을 바꾸어서 보면 자녀나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용카드가 무엇인지, 국민교육을 시킬 수 있는 효과도 반대로 있는 것 같아 이번 안건은 통과시키고 나중에 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음.
- (위원) 부정적인 쪽이 소수의견인 것 같음. 다른 의견은 없는지?
- (위원) 신용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본인 역량으로 소득을 올려서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신용에 맞는 것이지, 그것을 부모에게 기대어 한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좋은 얘기이지만,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신용카드가 아닌 데빗카드(Debit card)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렸을 때부터 신용이라는 것은 본인이 쌓아가는 것이라는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으로도 필요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부채가 너무 과한 부분도 앞으로는 교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열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음. 아까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이슈라고 생각하며 많이 부

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것이 어떤 점에서 혁신인지 잘 모르겠음.

- (보고자) 이것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들에게 쥐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 양도를 해서 분실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만약 자녀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하게 되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사용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지급수단이라는 것이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이와 같은 지급수단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들임. 그리고 또 하나 가족카드는 자녀의 신용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용으로 발급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니까 신용의 기본 원칙도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위원) 이 건은 다수의견으로 통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 재논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더 제시할 의견이 있는지?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데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급한 것은 아닌지?
- (보고자) 급한 건은 아님. 그렇게 하겠음.
- (위원) 그렇다면 소수의견의 위원들도 확신이 들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보류도 가능한 것인지?

○ (보고자) 가능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단, 제430호 및 제431호는 보류함)

□ 의결안건 제447호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의 비공개기간 연장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19년 금융위원회에 1년 비공개로 상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5건에 대해 비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8호 『(주)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대리점이 수수료 지급 관련 보험업법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9호 『○○○○에 대한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법상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미이행한
◆◆저축은행 대주주 ○○○○에게 보유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0호 『국세청의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안』을 상정
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국세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을 기관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1호 『국민은행 등 21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
용을 설명함

※ 국민은행 등 21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하는 내용

- (위원) 21개사 중에서 3개사(우리은행, 신한은행, 현대캐피탈)의 경우는 대주주보다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은지? 마이데이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거나 금융회사들의 위법행위 내용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 어쨌거나 은행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이고 그리고 위반내용도 중징계 사안들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6개 신청업체에 대해 대주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류를 했는데 대주주도 아니고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취지인 것 같음.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음. 법상 대주주는 보면서 본인은 안 보는 것이 이상해서 다른 법령을 찾아봤음. 다른 법에는 신용정보법을 제외한 모든 법은 신청인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다 보고 있음. 다만, 은행법이나 저축은행 쪽에는 없는데 그쪽은 겸영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설립할 때는 대주주만 보면 됨. 그러니까 은행법에 신청인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은 볼 것이 없음. 일단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현재는 기존사업자만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십 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기 중에 있고 CB업이라든지 개인사업자 CB, 비금융 CB, 기업 CB, 이번에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개 이상의 예비허가 업체가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예비허

가를 신청할 것 같음.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들의 본인의 중징계 사실을 전부 다 안 볼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지난번 안전검토소위원회 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음. 현행법상은 이것을 이유로 허가를 안 해 주기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 소위에서는 그래도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법상으로 하고 향후 입법보완이라든지,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었음.

- (보고자) 법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전법 같은 경우는 본인제재 여부를 보고 있고 신용정보법, 은행법, 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은 본인의 제재 여부를 허가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다양한 측면이 있음. 만약 이번에 이런 요건을 보고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면 침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에 없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적용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융지주나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본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주주를 보면 어떠냐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새롭게 나오는 것은 대주주가 있고 본인도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금감원 보고가 있어서 논의를 했음. 기본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법령상 구체적인 요건이 없는 사항들에 대해 해석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는 것임. 그다음에 마이데이터업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입법자가 실수를 해서 그 부분을 뺀 것이냐, 아니면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함. 지금 본인에 대한 신용을 보는 부분은 금융의 본업을 하는 업종들임. 그런데 사실 마이데이터업의 경우는 금융업이 아니고 금융보조 또는 유사 관련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뺄 가능성도 있음. 왜냐하면 금융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차등화를 시킴. 인허가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니까 이런 차등화 되는 입법취지들이 반영이 됐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없는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그리고 아시겠습니까만 지금 여기 신청했던 업체들이 기존에 자유업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던 것을 정부가 공적으로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사실 허가제도를 창설한 것임. 새로 들어온 업체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령상 예외적용이라든가, 이런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치가 일체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이루어져서 저희 쪽에서 보면 앞으로 본인에 대한 신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판단도 남아있음. 대주주에 대한 것들도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봄. 그 논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업을 해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는 것이 맞고 그것의 주주까지도 해당되는 것이 맞다고 봄. 다만, 금융업이 아니고 금융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금융과 유사업을 할 경우 대주주라든가 본인의 요건을 금융업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

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됨. 그런 관점에서 이 3개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유로 침익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서 금융위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 (위원) 우선 금융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업이 앞으로 미래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니까 이것은 잘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감독기구가 과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하자가 있는 금융회사에게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잠재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두 개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법령상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허가가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최소한 이런 요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재량이 우리 위원회에 있다면 여러 가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유업으로 인정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할 것인가를 입법자가 선택한 것임. 크게 보면 엄격한 인허가제도가 있고 등록제도가 있고 자유업도 있는데, 자유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록이 아닌 엄격한 허가로 끌고 오면서 이것이 다른 일반 보험이나 이런 것처럼 엄격한 요건으로 심사를 할 것인

가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됨.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물론 감독이나 인허가에 있어서 재량이 있는데 그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요건 내에서 재량이지, 그것을 현재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법에서 없는 요건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봄. 물론 법에서 일정한 예를 들어 대주주 요건을 하면 대주주의 범위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허가신청인 본인에 대한 요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특히 이러한 영업을 했던 회사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 (보고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는 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금융관련 법령에서 전부 다 금융회사로 간주를 하고 있음. 특히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은행이나 증권, 보험보다도 더 강한 대주주 요건을 요구함.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나면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50% 이상이 금융회사로 구성이 되어야 함. 개인이 신용정보회사를 가질 수 없음.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은 예외로 해주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신용정보회사는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을 다른 법보다 더 강하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두 번째는 재량권 여부인데 사실은 저희가 과거 인허가 사례를 쪽 살펴보면 인허가 조건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을 행사해서 한 사례가 제법 있음.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음.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자유업을 하고 있던 것을 새로 오피아하는 것이

기 때문에 기존 고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는 것은 사실임. 어쨌든 상당히 방대한 고객 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를 허가해 주면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완전 판매가 있고 여러 가지 불건전영업행위가 있었던 곳을 대주주는 보면서 본인을 안 본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음.

- (위원) 문제제기에 동의하고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며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음. 엄격히 따지면 법규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제해서 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고, 양쪽이 팽팽히 맞설 때는 제가 알기로는 고객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21개사를 통과시켜주고, 앞으로도 개인 CB라든지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계속 대주주 요건만 볼 것인지 본인 요건을 볼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법화를 다시 추진해보든지, 아니면 입법화를 안 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음.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자가 검토해서 금융위에 상정하여 안건이 적은 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위원) 지금 세 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주)우리은행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키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 (위원) 입법을 보완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후에 추진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듭. 당장 이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니니까 이 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입법 검토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위원)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가 입법예고 한다고 6개월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6개사 안 한 것도 2월까지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2월까지 허가가 안 나오면 못함.
- (위원) 그래서 대주주 요건 해결할 때까지 못하는데 그것이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 고객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입법될 때까지 보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음. 아까 신용카드는 다음 번 회의 때 논의해보자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다 법을 고치고 이 부분은 같이 논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음.
- (위원)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3곳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합당한 지적이었던 것 같음. 다만,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렇다하더라도 일단 법에 없는 것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니, 일단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51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번 회의와 금감원에서 지적된 문제, 단순한 3개사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2호 『SCI평가정보(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SCI평가정보(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신규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4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사유 인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초과 허용기간을 '21.6.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5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조치명령('20.6.30.)이 '20.12.29.
종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
보하기 위하여 기존 조치명령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6호 『캡스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문사모운용사인 캡스톤자산운용(주)이 부동산 공모펀드를 운
용하는 단종 공모운용사가 되고자 집합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7호 『(주)케이비손해보험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비손해보험이 퇴직연금신탁을 운영하고자 금전신탁업 변경인가를 신청한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8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더케이파트너스 유한회사 및 수민Investment 유한책임회사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의 주식 49.65%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9호 『케이비증권(주)의 주식회사코크랩제51호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비증권(주)이 주식회사코크랩제51호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후 출자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60호 『케이비증권(주)의 주식회사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비증권(주)의 주식회사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후 출자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61호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회사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리츠증권(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주식회사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후 출자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62호 『(주)OO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OOOOOOOOOO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감사인에 대한 조치로 '경고', '지정제외점수 10점'을 부과조치하셨는데 그 조치가 OOOOOOOOOO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 (보고자) 회사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감사인에게 자료제출을 안 하는 등 감사인이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해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조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과실'로 조치한 결과임.
- (위원) 증선위에서 수정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바람.
- (보고자) 우선, 대선 테마주로 인식되어 일평균거래금액이 회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급등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경영관련해서 前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횡령 등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음. 그 이후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음. 그리고 최대주주가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하는 등 경영혁신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고 있음. 실무반에서는 감경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62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한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회사의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일평균거래금액이 급증하여 위반행위 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점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관련 과징금의 5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42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결과 보고』, 제43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 제44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결과 보고』, 제45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결과 보고』, 제4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개정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7호 『일반기업회계기준 2020 연차개선 개정결과 보고』, 제48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의 유효기간 신설 개정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조

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49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 제50호 『2020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2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42분 폐회)